

종합

# 투표 코앞인데 선거공보물 언제 오나

## ‘선거 5일 전 발송’ 규정에 후보자 비교 어려움 200페이지 1kg 분량 집배원들도 격무 시달려

전례없는 1인8투표제로 치러지는 6·2 지방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 선거 공보 발송이 ‘선거일 전 5일까지’로 규정돼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8개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탓에 선거 공보물이 무겁고 분량이 많아 공보물 발송을 담당하고 있는 집배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 선거공보 발송 ‘너무 늦다’=28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 전 5일까지로 규정된 선거공보 발송을 이날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내 유권자에게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1인8투표제로 광역

단체장·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교육감·교육의원 등을 뽑는 전례없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선거공보가 너무 늦게 도착한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 공약 등 상세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선거공보가 선거일을 일주일도 채 안 남긴 시점에 각 가정에 도착, 후보자 선택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유권자들의 지적이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사는 장모(여·42)씨는 “오늘 아침까지도 선거공보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도지사나 시장 후보 정도는 언론을 통해 이름이나 대략적인 공약 등을 알지만 다른 선거 후보들은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몰라 선거공보만 기다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다수 유권자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후보들을 비교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선거공보뿐이라며 선거공보 발송기한을 지금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후보자들로부터 24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받은 뒤 26일까지 선거명부를 확정해야만 공보물 발송이 가능하다”면서 “선거명부 확정 뒤 곧바로 읍·면·동별로 발송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늦어도 31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보물 분량 많아 집배원 격무=6·2 지방선거 공보물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모든 가정에 빠짐없이 공보물을 배달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보물에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의 공보물까지 늘어나

배달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선거구마다 20~30명 안팎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각 가정에 배달되는 공보물 무게가 보통 600g~1kg으로 우편물로는 무겁고, 책 200페이지 분량으로 두꺼워 일부 아파트 1층 입구 우편물함에 투입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배원들은 아파트 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거주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전남체신청 우편물류과 배대진 계장은 “6·2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공보물 양과 부피가 늘어나 체신청 전 직원이 분류작업에 눈코 뜰 새 없다”며 “특히 아파트 우편물함에 기존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경우 공보물을 우편물함에 넣기 어려워 집배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공보물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가 전체 아파트 가구의 10% 정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선거 공보물은 29일까지 130만 가구에 배달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시설

## 적자에도 고액 연봉 받는 지방공기업 임원

광주·전남지역 공기업 5곳 가운데 4곳이 적자를 보면서도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전국 평균 보다 많고 기관장 연봉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역대에 달한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지난해 이들 공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3844만 5200원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 연봉 3371만원보다 470여만원이 많다고 한다. 특히 기관장은 연봉 8172여만원에 업무추진비로 1444만원~330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역대에 이르는 셈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지난해 37억원 이상의 적자를 났음에도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760만원에 달하고 기관장은 162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710억원의 적자에도 임원들의 연봉은 7994만원에, 기관장은 업무추진비로 1444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의 흑자를 낸

광주도시공사를 제외한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시환경시설공단 등도 사정은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사실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방만한 운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퇴임 후 일자리 용도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부실경영과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재정악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공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상한 불능에 빠지면 지자체가 주민의 혈세로 갚아줘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고삐를 바짝 조여 적자를 털어내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물론 성과연봉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역대에 가까운 임원들의 연봉과 업무추진비 역시 적자가 지속된다면 삭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철저 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해야

전남에서 저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해 축산농가에 이상이 걸렸다. 이미 함평과 담양에 이어 장성·곡성 등 4개군 지역에서만 8만3500여마리의 오리 가 살처분됐다.

인체 감염 위험이 없는 저병원성 인플루엔자도 확산될 경우 오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4개 지역 오리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44개 농장 가운데 2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8곳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서둘러야 한다. 해당지역 농장의 오리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주변 축사와 종사자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축전염병 발생이 잦아지면서 축산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말전에는 구제역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여 축산농가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가축 전염병은 방역망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결집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확산된다. 신속한 신고와 방역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적 살처분 등이 고작이다.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은 자칫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물 교역이 중단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 요식업 등 관련 업계에도 연쇄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을 규명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동 방역망 강화와 함께 장비와 인력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차체에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축산농가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 나주 거소투표 부정 공방 “관권선거” “적반하장”

나주지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거소(居所) 투표 부정 사건을 놓고 후보자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8일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거소투표 과정에서 다시 11건, 공산면 3건 등 모두 14건의 부정선거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또 이들 지역 이외에도 봉황, 문평 등지에서도 부정선거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과정에서 일부 이장 등이 관여하고 일부는 특정단체 간부 등이 개입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임성훈 나주시장 후보와 무소속 김대동·이광형 후보는 이날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에 엄정한 조사와 고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나주 전역에서 이장과 시민단체 간부 등이 연루된 관권선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관권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른바 배후로 지목된 무소속 주향득 후보는 반박자료를 내고 “거소투표 부정 이 이뤄진 곳은 특정후보 연구지로 적반하장”이라며 “선관위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정한 처리를 하라”고 촉구했다.



전통문화관 기공식

국악과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전통문화관 기공식이 28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문화관 공사 부지에서 열렸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전통문화관은 6471㎡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국악당과 무형문화재전수관 등이 들어선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통일부 “개성공단 국민 위해 단호대처”

## 입주기업 대표들 “대북 심리전 자체” 정부에 요청

북측이 우리 정부의 심리전 재개 방침과 관련, 개성공단 통행 차단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 현지 체류 국민의 심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정부는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측은 심리전 재개 시 확성기 격파사격, 서해지구 관리지역에서의 인연·차량 전변차단, 군사적 보장조치 철회, 동·서해 군통신선 및 개성공단에 대한 육로통행 차단 검토 등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측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

인 우리 국민의 심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존 ‘대북조치’를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대북 FM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및 전광판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심리전 문제가 개성공단과 맞닿아 폭발적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으나 국제

사회의 질타를 무릅쓰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여명은 28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에 대북 심리전을 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인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임원 10여명은 이날 통일부 산하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방문, 개성 체류인원들의 심안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연합뉴스

##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與 취소로 무산

민주당 “회의 단독 강행”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의 제2차 회의가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취소 통보로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전날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에겐 전화를 걸어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성원이 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속 김학송 특위 위원장도 연

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 개최는 간사간 협의의 사항”이라며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오늘 특위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것은 예상초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한나라당은 연일 진정어 날 것처럼 호들갑 떨며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니 정작 특위 정상화에는 왜 소극적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강진군 등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립비 지원 추진

복지부, 전국 50여 곳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가 없어 분만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산부인과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지역을 취합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분만율이 30% 이하이면서, 1시간 거리에 분만 가능 병원이 없고, 가임기 여성이 1천명 이상이거나 연간 신생아가 250명 이상 출생하는 지역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강진군과 무주군, 고성군, 강화군 등 50여곳이 대상지역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중으로, 지원지역 선정이나 예산지원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설립비와 운영비도 각각 6억원, 2억원 안팎에서 지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실무차원의 검토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빛日만평

- 김종두

씩수없는(?) 선거

##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낮다

### 전남 230가구 조사 ... 30% 그쳐

전남지역 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개발연구원이 2008년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도내 230가구의 다문화 가족을 개별 방문 조사해 분석한 ‘전남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9%가 ‘육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서비스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나타낸 사람도 10.3%에 달했다.

반면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0.4%에, 다양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서비스 프로그램의 생활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프로그램의 수준도 적당하다는 응답이 46.5%를 차지했다.

서비스 프로그램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는 34.8%가 긍정적 인 태도를 보였으며, 29.6%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에만 집중돼 있어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자녀양육 상담, 모국어 서비스, 사회.제도.문화.관습의 차이에 대한 학습 등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수요가 다양해졌다”며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다채롭고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